

# 特 輯

## 國際化·開放化 時代に 對備한 商工資源施策 方向

### I. 對内外 經濟與件의 變化

- 지금 세계경제는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유럽 연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고 7년동안 끌어오던 UR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경제질서가 급변하는 변혁기에 처해 있다.
- 지난 12. 15일 타결된 UR협정은 다자간 협상 과정에서 상호 타협과 양보로서 이루어낸 결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심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우리가 원하던, 싫어하던간에 수용할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자유무역과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UR은 세계 무역의 자유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대외지향적인 성장정책을 추구하는 우리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중요하 것은 이를 어떻게 우리경제에 접목시키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 － 첫째, UR에서는 세계 각국이 관세장벽을 낮추어 세계 무역을 증진시키도록 하였고 이

### I. 對内外 經濟與件의 變化

### II. '93年 成果와 反省

### III. 금년도 商工資源施策 方向

#### 1. 基本方向

#### 2. 本格的인 經濟活性化의 推進

#### 3. 産業의 國際競爭力 強化

#### 4. 과감한 國際化戰略의 推進

에 대비하여 그동안 꾸준히 관세율을 낮추어 온 우리로서는 새로운 부담이 적으며, 오히려 다른 나라가 관세율을 낮추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의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다.

- 둘째,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면서 선진국의 자의적인 제도남용을 대폭 제한하여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이 받아온 고통을 많이 덜게 되었다.
- 셋째, 무역관련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제정되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자국산 원자재 사용의무화, 대용수출의무 부과 등과 같은 제한이 폐지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개도국에서 이러한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었다.
- 반면에 UR타결은 우리경제의 국제화와 체질 개선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 첫째, 그동안 선별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되어 왔던 농산물·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들 분야에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가 당면과제가 되었다.
  - 둘째, 수출관련 보조금뿐만 아니라 수입대체 및 산업지원 관련 보조금중 상당부분에 대한 규율과 다자간 감시체제가 대폭 강화되어 국내 산업지원제도를 국제 규범에 일치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 셋째, 그동안 다자간 섬유협정(MFA)으로 규정되어 온 섬유 쿼터제도가 점진적으로 철폐됨으로써 중국등 후발 개도국의 수출이 확대되어 선진국 시장에서 시장유지와 경쟁력 보장을 위한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

폐선화등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 정부는 그동안 UR협상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다자간 협상의 성격상 일방적인 수혜자는 있을 수 없고 상호타협과 양보속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UR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체질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길 뿐이다.
  - 이러한 UR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계각국이 경제블럭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다.
    - 금년 1월부터 유럽연합(EU) 12개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6개국과 함께 유럽경제지역(EEA)으로 발전하였고,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우여곡절 끝에 금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APEC이 발전하는 등 세계 19개 지역에서 지역경제권 형성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주의 경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이러한 블럭경제의 형성은 GATT의 규정과 정신을 준수하는 테두리내에서 용인되고 있지만, 과거 EC의 예에서 보듯이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이를 경계해 나가야 한다.
    - 한편 APEC은 유럽연합이나 NAFTA에 비하면 지역공동체로서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역사적인 정상회담과 제5차 각료회의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앞으로 APEC은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모체로서 유럽연합, NAFTA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로서는 각 지역공동체의 움직임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GATT와 APEC을 통하여 개방된 지역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세계경제는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는 변혁기에 있으며 기업활동의 국제화,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한 나라의 산업경쟁력은 종래와는 다른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 과거 국경을 전제로 한 국제화는 각국의 고유한 무역·산업체제하에서 기업의 수출과 투자활동이 단순히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경제적 의미의 국경장벽이 거의 없어지면서 각국의 무역·산업체제가 동질화되고 기업활동도 세계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생산판매, A/S를 최적지에 배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하는 세계화로 치달고 있다.
- 또한 예전에는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의 산업이전이나 선진국·개도국·후진국간의 경쟁력 격차가 큰 의미를 가졌으나 국경없는 세계무역시대에는 이러한 개념들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 선진국기업의 자본협력과 기술이전은 지역 협력체의 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기업활동이 유리한 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 따라서 선진국의 자본이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 심지어 선진국마저도 공장입지를 무료로 제

공하거나 공장까지 건설해 주면서까지 외국 기업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사가 세계 산업주도권을 쥐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험을 빌어 이들의 발전과정을 따라가는 추종기(Follow-up Stage)의 역사였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을 따라잡는 추격기(Catch-up Stage)의 역사가 될 것이다.
  - 그동안 우리의 경쟁우위 창출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개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피하는 후발자의 이익(Late Comer's Advantage)에 근거했으나,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배양하여 선진국 기술에 진입하는 선발자의 이익(First Mover's Advantage)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 따라서 이제 우리도 세계화의 흐름에 보다 정확한 인식을 갖고 선진기업과 전략적 제휴, 투자유치등 과감한 국제화·개방화정책을 추진해야만 우리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II. '93年 成果와 反省

- '93년초 신정부 출범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경제는 그동안 누적된 경제제도상의 여러가지 폐해와 경기침체, 그리고 이로 인한 기업, 근로자 등 경제주체들의 의욕저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새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운영에서 오는 비능률을 제거하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금융·재정등 각 부문의 제도개혁과 경제규제완화를 통하여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

- 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 이러한 노력의 성과중의 하나로, 지난해의 수출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824억불로 착실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수입은 2.5% 증가한 838억불로 안정세를 지속하여 무역수지가 아직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4년만에 20억불 상당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특히,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에서 선진국 기업들을 바짝 추격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향후 우리경제를 주도해 나갈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 통상측면에서는 UR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APEC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무역질서에 적극 대처하면서,
    - 미국, 일본 등 기존의 교역국과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고, 새로운 주요시장인 중국 등 개도국에 대해서는 교역다변화를 통한 진출기반을 강화하였다.
  - 산업측면에서는 세계경기의 불황속에서 5% 내외(추정치)의 성장을 달성했고, 특히 중화학 부문에서 건실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산업의 구도고도화가 꾸준히 추진되었다.
    -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조 3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자동화, 정보화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등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추진했고, 에너지 공급 능력을 계획대로 확충함으로써 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이룬 바 있다.
  - 한편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차원에서 추진된 경제행정 규제의 완화는 작년말 현재 전체 966개 개선과제중 589건이 조치되었고, 상공자원부의 경우 소관과제 122건중 81건의 과제가 완료되어 규제완화에 가장 앞장선 정부부처가 되었다.
  - 그러나 작년은 『신경제 5개년계획』이 첫해였던 만큼 경제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여러 분야에서 반성할 점도 많았다.
    - 즉, 섬유, 신발 등 경공업부문에서 수출이 당초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엔고등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 EC 등 선진국시장에서 경기회복 지연으로 예상보다 수출이 부진하였으며, UR등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홍보능력이 부족하였고 유럽통합, NAFTA 등에 대응하여 현지투자 확대 등 사전대비가 미흡하였다. 또한,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회복세가 본격화되지 못하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아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규제의 완화는 일선행정기관의 이해부족 등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도 정부가 깊이 반성해야 할 점들중의 하나이다.
  -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신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여 행정의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 III. 금년도 尙工資源施策 方向

#### 1. 基本方向

- 올해는 대내외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 경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국제화·개방화등 세계적인 흐름을 냉철히 받아들이고 무한경쟁에 과감히 도전하여 선진국으로 향한 힘찬 도약을 이루어야 할 해이다.

- 이를 위해서는 신경제정책의 추진이후 다져 온 경제 활성화의 토대위에서 기업인과 근로자는 물론 국민의 힘을 합해 행동과 의식 개혁을 서두름으로서 튼튼한 국제경쟁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상공자원부의 施策 방향은 다음 4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첫째, 투자와 수출을 촉진시키고 노사화합과 물가안정을 추진하여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성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
  - 둘째, 21세기에는 우리나라를 선진국가로 진입시키고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줄기차게 밀고 나간다.
  - 셋째,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경제질서에 대비하여 우리경제의, 과감한 국제화와 개방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든다.
  - 넷째,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

## 2. 本格的인 經濟活性化 推進

-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촉진과 노사화합의 정착, 공산품과 에너지가격 안정, 기업활동 규제에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본격적인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 상공자원부가 지난 1월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24개 업종 200개 주요 기업 및 30대그룹의 금년도 설비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보다 50%정

도 투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 이와같은 큰폭의 투자증가는 미국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및 국내 행정규제 완화등으로 경기전망이 밝아 기업의 투자심리가 안정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연내에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주요기업의 투자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 투자수익율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施策을 통하여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금융·세제면에서 외화대출조건 개선 등 해외금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적용 하는 등 투자촉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 좋은 조건의 공장입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의 공장·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고 농림입지에 공장건설이 가능토록 개선해 나가며, 공업단지 분양가격을 사업시행자 이윤(5%) 및 공단관리비 인하등을 통하여 기존보다 20% 내외로 인하하도록 하겠다.
  - 또한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유통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며 전국 4대권역의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 경제활성화 施策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여건인 노사화합이 금년에 확고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노총·경총간 임금인상수준에 대

한 조기합의를 유도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임금안정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겠으며, 노사 모범업체를 발굴하여 그 사례를 산업전체로 확산시키고 능력급·직무급 방식의 임금결정 모델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촉진토록 하고 다만, 불법분규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 또한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산품의 가격이 안정되도록 품목별로 수급원활화 대책을 수립하고, 원가상승요인은 생산성 향상으로 최대한 흡수토록 유도하며 주요원자재에 대해서는 탄력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비축물량과 방출시기를 조정하는 등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겠다.
- 한편 작년 한해동안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경제규제완화는 개선내용이 주로 인·허가등 당해 규제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규제완화의 파급효과가 기업의 기대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따라서 금년부터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제도의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두어 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무역, 산업등 각 분야별로 자체 발굴한 32개 법률과 관련된 200여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기업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상공자원 분야의 규제완화는 타분야보다 앞서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규제 완화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겠다.

- 작년에 설립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하고 위원회의 건의사항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개선된 내용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규제완화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를 파견하여 일정기간 현장에 지도토록 하겠다.

### 3. 産業의 國際競爭力 強化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요소는 기술개발이다.
  - 특히, 국제적으로 이제는 각국의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우리 자체의 기술개발 없이는 산업의 발전도, 수출의 신장도, 환경의 개선도 불가능하며 자체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그 존립조차 어렵게 됐다.
- 정부는 우선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중 『산업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업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인력양성과 기술정보망 구축등 기술하부구조를 확충해 나가며, 상공자원부내에 산업기술국을 신설하고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관련 연구소의 기능을 개편하여 민간생산 기술연구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업지원조직과 제도를 과거의 총력수출체제와 같은 『기술드라이브』 체제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시키기 위한 업종별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철강, 액정소자, 멀티미디어등 12개 핵심요소기술을 중기 거점기술개발 사업으로 선정하여 기업주도로 산·학·연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차세대 자동차, 첨단생산시스템등 선도 기술개발사업과 항공우주 개발사업등 장기 대형기술사업을 정부주도로 개발하되 기술개발의 중간성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 또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및 경험부족 등으로 실용화개발과 사업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자금, 입지, 설비, 기술·경영지도 등을 종합지원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육사업』(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T. B. I)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신기술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판매확대 지원을 위해 신기술 인증(N. T. 마크) 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다.
- 이와 함께 우리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 기술, 인력의 장기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기 인력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체계의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
  - 이를 위하여 공고-전문대-기술대학(원)으로 기술 교육체계가 개편되도록 금년중 『산업기술대학법』을 제정하고, 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2년간 학교교육, 1년간 산업체에서 실습교육을 하는 『2+1』체제로 개편하여 기능인력의 현장적응능

력을 적극 배양해 나가겠다.

- 또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건립중인 9개 공동훈련원을 상공회의소에 이관·운영하는등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산업계 공동의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생산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특히,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 특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2만 9천명의 인력을 추가 공급하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활용하여 2만명의 기술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한편 우리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는 한정된 자본·인력·기술등 모든 생산요소를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원활히 이동시켜 산업구조조정이 단절없이 이루어지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따라서 정부는 성장유망산업으로의 활발한 진입과 경쟁력 약화산업에서의 원활한 퇴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업발전』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2000년대 우리 산업발전을 선도할 첨단기술산업의 시장전망과 기술동향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및 우리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21세기를 겨냥한 『첨단기술산업 발전비전』을 수립하며, 섬유·신발등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에 대하여는 노후시설 교체와 설비자동화를 촉진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소재와 패션·디자인개발을 중점지원할 계획이다.
  - 이상의 산업구조 고도화 시책등은 산업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대기업업종전문화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 앞으로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모든 업종에 걸쳐 국내시장에 대한 보호조치가 철폐되면 해외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의 세계일류기업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비관련업종으로의 다각화에 의한 산업의 확장(Industrial Widening)보다는 주력업종에 집중하는 산업의 심화(Industrial Deepening)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세계 일류기업으로 키워나가야 기업자체의 생존보장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 8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유수 대기업들의 흡수·합병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고 일본과 비교하여 과학기술이 우수한 미국이 신기술 발명에 앞섰으나 산업조직의 비효율성으로 생산공정기술 및 가격, 품질, 납기등 상업화단계의 경쟁에서 뒤짐으로써 관련산업의 상당부문에서 일본에 패배하는 많은 사례를 보아왔다.
- 이러한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한 때 세계를 제패했던 초일류 대기업들마저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술혁신등 경영변신을 이룩하지 못하면 마치 공룡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서 멸종되듯이 국제시장에서 리더쉽을 상실하고 존립마저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 정부는 작년 7월 대기업집단이 비관련 다각화를 자제하고 비교우위의 업종에 전문화함으로써 주력기업의 규모를 국제수준으로 확대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대규모 업종전문화시책 기본방향』을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고, 지난 1.18일 30대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종합하여 발표한 바 있다.
- 금년중 기업들이 선정한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에 대하여는 업종전문화 유도시책(93. 10. 29 산업정책심의회 확정)을 중심으로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러한 대기업정책과 함께 중소기업들에 대하여는 과거 『보호와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산업 및 중소제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 지원할 것이며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건실하고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해 나가겠다.
- 이에 따라 지난해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통애로 기술개발등 기능별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 계약제도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며,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전에 따라 계열 중소기업의 이전 집단을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으로 지원하고, 계열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지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 또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2,000억원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주요지역에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역협동기술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한편, 유통분야는 지난 88년 수립된 『유통시



장 3단계 개방계획』에 따라 96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소매업종에 대한 점포수(20개) 및 매장면적(3,000㎡미만) 제한이 철폐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국내 유통업체들은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시책들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국내유통업계의 전문화·현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에는 판매용 시설에 대한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여신관련규제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할인판매등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토록 하겠으며, 『도·소매업 진흥법』을 전면 개편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강하는 동시에 연쇄화 사업자 지정확대 및 상업협동조합 공동구관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등을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조직화·협동화를 지원토록 하겠다.

#### 4. 과감한 國際化 戰略의 推進

-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노력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UR등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교역환경에 부응하는 입체적 통상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 먼저 95년중 발효될 UR협정에 맞추어 금년 중 무역과 산업관련제도를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정비를 추진하되, 기술개발의 경우 UR협정에서 산업적 연구(Industrial Research)는 총비용의 75% 이내, 경쟁전 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은 총 비용의 50%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을 중점지원하는 방향으로 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무역금융, 무역어음등 수출 지원제도를 보완하며, 각종 개별법상의 수입관리를 개선하는등 수출입절차를 국제수준으로 더욱 간소화하며 무역자동화 사업을 상역부문뿐만 아니라 통관부문까지 확대하겠다.
- UR타결에 따라 섬유산업등 전면개방에 대처해야 할 산업은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력 보완대책을 집중 추진하며, 농산물등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
- 다음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경제지역(EEA)이 우리에게 배타적인 블록이 되지 않도록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이들 국가들과 통상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자동차, 전자등 유망분야들 중심으로 조립산업일괄 부품업체의 동반진출과 현지 합작투자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태 경제협력기구(APEC)에서 우리나라는 무역투자위원회(CTI)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주도하고, 지난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제의하신 테크노마트, 직업훈련사업등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등 역내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 특히 금년에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향후 국제무역의 감동자 역할

을 수행할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에 적극 대비하고, 하반기부터 시작될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협상 및 무역·공업·철강등 산하위원회에서의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며,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기반 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기술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

- 또한 시장별 특성에 맞추어 주요 교역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및 공동사업을 확대하여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기업의 국제화, 세계화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

— 우선 미국, 일본등 주요 선진국과는 첨단 분야에 있어 기술제휴, 중견기술자 인력 양성, 산업현장 기술협력등을 활성화하여 산업동맹(Industrial Alliance) 관계의 구축에 노력하고, 중국, 동남아등 새로운 주력 시장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직접투자등 현지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인 시장기반을 다지며, 러시아, 베트남등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제개발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진출을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

- 이러한 통상외교차원 노력과 함께 국내적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케팅 능력을 적극 배양하기 위하여 유망 수출상품에 대한 일류화사업, 자기상표개발, 해외판매망 구축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최근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외화자금을 우선활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해외시장 개척기금의 확충('93:100억원 → '94:200억원)등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늘어나는 전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 제2 종합전시관 건립,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무역연수원 설치 및 국가이미지와 상품홍보사업을 위한 한국무역홍보센터 설립등을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다.

- 금년도 수출은 무역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시장여건의 호전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한 900억불로 전망되고, 수입은 경기활성화 및 투자회복으로 인한 시설재 도입 확대등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한 900억불로 예상되며 수출입간에 균형을 이루고 국제수지 기준으로는 약 30억불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러한 전망치는 각국간 수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달성될 수는 없으며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역량을 수출에 총집결해 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 이를 위하여 상공자원부는 지난 121일 품목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지역별 수출증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민관합동 『수출활성화 대책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당면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통해 수출촉진 방안을 강구하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물론 지방 자치단체와 재외공관도 수출지원을 위해 다함께 뛰는 총력 수출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

# 우리강산 더 맑게 더 푸르게